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발표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 성명서

우리 한국원자력학회는 2017년 10월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와 더불어 원전 축소를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발표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는 당초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때부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여부와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무관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탈원전정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기 부정에 불과합니다.

둘째, 공론화의 전체 설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축소보다 유지 및 확대가 우세했고, 마지막 한 차례 축소가 높았던 것을 근거로 축소를 권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시민참여단 471명과는 달리 1차 조사에 응한 20,006명의 의견은 원전비중의 유지 및 확대가 원전비중 축소보다 4.8% 높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공론화위원회의 같은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이후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탈원전을 지지하는 비율은 4개 항목 중 13.3%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후속조치와 비교하여 탈원전 정책 유지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력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자력이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악으로 규정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가는 그 사회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선거공약에 집착하여 성급하고 무리한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론화 권고는 신고리 5, 6 호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를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므로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은 현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하나,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정해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을 더 이상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고, 진정한 속의 토론과정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성급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철회하고 국회 주관의 전문가 참여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한국원자력학회 회원 일동

[설명자료] 불합리한 탈원전 로드맵

정부가 어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원자력계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신고리 건설재개 기쁨은 사흘 밖에 못갔습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이 로드맵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탈원전이 국민의 뜻이 라는 자의적 해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중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 조사에서는 원전 축소 의견은 39.2% 로서 유지 및 확대 의견보다 4.8%p 적었습니다. 시민참여단 471명만 대상으로 한 3차 조사에서도 4.6%p 적었습니다. 다만 숙의토론 후 진행된 4차 조사에서 축소 의견이 8.0%p 우세하게 나온 것은 건설재개를 선택해 준 일부 시민참여단원이 정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합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의 8%는 34명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소수인 이들의 온정을 건강부회하여 중차대한 국가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비중 축소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임무에 없는 월권적인 권고이며 불합리한 권고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대선공약을 공론화위원회의 이 부당한 권고로 정당화하여 탈원전이 국민의 뜻이라고 한 것은 자의적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한 번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2. 탈원전과 원전 수출지원의 이율배반

어떤 나라가 원전이 위험하므로 탈원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우리나라의 원전을 수입하겠습니까? 이는 이율배반이며 도덕적이지 못한 방침입니다. 탈원전을 포기하면 세계 정상급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기술로 블루오션 원전 수출시장에서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정도입니다. 원전기술은 고도의 기술이므로 아무 나라나 할 수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3. 원전 해체시장에 진출하자는 모순

원전해체 시장은 향후 50년간 약 300조 즉 연평균 6조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 이미 해체 기술과 경험을 확보한 해외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원전해체는

약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체 기술개발을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 수출을 해보려면 2030년 이후에나 됩니다. 그 이후도 우리나라가 기존의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기의 해체 비용 약 6500억원을 15년에 집행하면 연 430억원 밖에 안되고 그나마 40% 정도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이라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세계 수준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건설 산업에 비해 해체산업은 기대수익도 턱없이 작은 레드오션입니다.

4. 원전 연장 가동 백안시

미국에는 88기의 원전이 가동기간 20년 연장 허가를 받아 60년을 목표로 가동 중입니다. 이중 44기는 이미 40년을 넘겨 가동 중입니다. 오래된 원전이라고 위험하고 고장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3년간 미국의 원전 평균 가동율이 92% (아래 인터뷰에서 93%라 한 것은 수치 착각) 였다는 점에서 입증됩니다.

5. 석탄과 가스발전 대책 누락

진정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면 석탄과 가스발전에 대한 계획도 응당 포함되어야 하는데 누락됐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가져가면 가스 발전 비중이 늘 수 밖에 없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월 3만원 내던 가정에서 인상 후 15,000원 더 내는 것과 월 100만원 내던 중소기업에서 50만원 더 내는 것은 영향이 다릅니다. 최근 세일가스의 생산성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가가 향후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정 에너지 믹스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미운 털 박힌 원자력은 무조건 줄이고 예쁜 자식 신재생만 잘 키우자는 단순한 논리의 탈원전 로드맵입니다.

6. 원자력 전문가 의견 일절 미반영

탈원전 공약은 수립 때부터 원자력 전문가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편견을 갖고 있는 탈핵인사들의 주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원자력을 백안시하는 청와대의 편견은 공약 수립 당시와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청와대는 탈원전을 지지하던 20, 30 대 사람들 다수가 숙의과정 중 원전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해 원전에 대한 여러 오해가 벗겨지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 재개로 선회된 것을 유념해 봐야 합니다. 청와대가 원자력 전문가와도 한 번이라도 소통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탈원전 기조를 재고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